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응

유 호 열 (고려대 북한학과)

| 요약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폐기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가들은 본격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도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각 분야 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북핵 포기과 관련한 중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이행조치 완료에 따라 현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감시를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는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상정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려되는 체제 위협 요인을 억제하고 현존 핵프로그램은 폐기함으로써 대규모 경제 지원을 획득함으로써 체제 생존 요인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2단계 불능화조치를 위한 협상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철회문제, 북미군사회담 개최문제, 경수로 건설문제 등 추가 의제들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결단의 순간을 지체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와 대담한 결단을 통해 북핵문제의 완전한 일괄타결을 진지하게 제안할 수도 있고 6자회담을 무실화시키고 핵무장을 가속화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은 평화선언이나 감정이나 정략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합리적 대선택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 동결 약속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평양 방문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후 파문이 확산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철수시키고 핵비확산조약(NPT)을 재차 탈퇴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파기시켰다. 북한은 이어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했던 핵시설을 재가동하여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보유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수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0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다시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2007년 초 본격적인 북미 양자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13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7년 6월 북핵문제 해결의 난관이었던 뱅코델타아시아(BDA)문제

가 해결되고 2.13 합의의 초기이행조치가 완료되었다. 이후 7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2단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입장과 해법을 논의하였다. 만약 모든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면 2.13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불능화조치를 이행하고 나머지 관련국들의 보상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종 단계에서 북한 핵은 폐기되고 동북아 및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 핵문제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가들의 북한 핵문제의 성격과 범위, 동결과 폐기 및 해체, 검증과 보상 등 관련 해결 방식과 순서 등 핵심 사항에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는 단순히 북한 핵개발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정세나 미국 및 북한의 국내외 정세 및 정책 변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참여 국가들의 입장과 전략에 수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핵문제는 보다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만일 북한의 전략과 정책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향후 6자회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면 사태가 악화되기

전 나머지 참가국들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1. 북핵문제의 성격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계획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전력생산과 학술연구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또한 2차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실험까지 강행했으나 북한은 이미 공개된 핵무기 개발에도 핵억제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과 핵물질의 테러집단 등 제3자로의 이전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존하는 핵개발계획의 동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데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문제에 관한 한 매우 불투명하고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도 북한은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받으려는 노력과 함께 당위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북한은 핵문제를 논의

함에 있어 전력생산과 의료 및 과학기술개발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개발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내세워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은 핵비확산조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도 문제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에는 구애받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취해 왔다.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은 핵문제의 범위를 확장하고 세분화하려는 소위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핵무기 개발계획과 평화적 핵개발계획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사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본격적인 핵 폐기 협상 단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 회담을 제안하고,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위협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다양한 의제의 산출과 핵무기와 현존 핵개발 프로그램을 분리해 접근하기 위한 수순의 일환이다.

북한은 2차 핵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핵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미국의 핵위협만 아니라면 핵을 보유할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핵무기 개발 비밀계획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1차 북핵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였고 동결이전에 원자료를 가동해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

는 무기급 플루토늄에 관해서는 향후 검증의 과제로 남겨놓았을 뿐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은 제네바합의 이후 핵동결 약속을 준수하였으며 오히려 경수로건설이 지연된 만큼 이에 상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차관보의 방북과정에서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논란이 확산되자 강석주 제1부상이 미국 대표단에게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6자회담에서도 그 같은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통한 비밀 핵개발계획과 관련한 논란과는 별도로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협상을 대비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중전략의 일환이었다.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은 없었으나 플루토늄을 통한 핵개발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핵억제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핵억제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계속했던 것이다.¹⁾

북한은 북핵문제의 성격을 과거 핵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계획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한편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에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은 핵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원칙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우선 현

1) 조성렬,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로드맵과 향후 과제,” 『한반도 군비통제』 41(2007.6).

존하는 핵시설의 동결을 포함하여 폐기와 해체가 이루어지되 그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보상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계획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검증받을 사항이 아니라 미국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 핵무기 개발 목표와 전략

북한이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핵무기가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음에도 그동안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과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전력생산 등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로 위장해 왔다. 이러한 위장은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반발과 응징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중국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직접 지원한 소련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식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92-3년 사이에 이루어진 IAEA에 의한 사찰 검증으로 그 당시까지 행해졌던 북한 핵개발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밝혀지거나 북한 스스로 공개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위 '과거 핵'을 일괄적으로 덮어버리기 위한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었다.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노출된 후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나 2002년 이후 그러한 목적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뚜렷한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전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사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라는 제2 경로를 통한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도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은 오로지 핵무기 개발과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계 유일초강국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강한 무장력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무력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생존권과 자주권의 문제는 이러한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피해, 공포의식에 따른 극단적인 저항의 표출이자 자위권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의 원초적 구실이었다.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과 위상을 절대화시켜온 수령제 독재국가이다. 수령유일체제의 존속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무기의 존재는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응한 군사용 뿐만 아니라 대내 통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무기이기도 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생존권과 자주권이 북한 정권과 김정일 체제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면 북한 김정일 정권으로서의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 내부의 이완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핵무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으로서는 북핵문제가 과거 93-4년의 핵위기 때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등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 결과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남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군사

적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은 남한 스스로 북한 핵문제의 인질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한반도전략 추진의 최적의 상황을 제공한 셈이다.²⁾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한 내 반미정서의 확산 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미동맹의 약화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침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함께 체제의 위신과 정당성을 제고하여 대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다중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북침위협에 대해서는 휴전선상에 전진 배치된 각종 화력과 재래식 병력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만 한미연합군에 의한 무력 침공 위협에 대해서는 핵무기가 가장 위력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약속과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비록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요구일 수 있다. 미국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함으로써 억제력을 극대화, 최대화하고자 한다. 미국에 대한 공포심과 적개심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은 커지게

2) 김근식,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포용정책: 상관관계와 지속 필요성,” 『평화연구』제15권 1호(2007년 봄).

된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전술적인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9.11 이후 미국의 선제공격론과 제한적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당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향후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미국이 느끼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담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93-4년의 핵위기를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타결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 전략을 앞으로도 고수하고자 할 것이다.³⁾

향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2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나 2.13합의에 따라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각종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버텨낼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으로선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북한에 더 유리한 제3의 선택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3. 핵문제 협상구도와 전략

핵문제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만 다루어질 경우 북한은 1 대 5의 불리한 구도에 놓이게 된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상호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모든 부

3) 유호열, “미북관계 개선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41(2007.6).

문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상호 경쟁적인 측면과 완벽한 의미의 가치 공유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에서 이들 국가들은 상호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을 강행한 상태에서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집단적으로 상대하기에는 벅찬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위협의 정도 역시 그 온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들 5개국은 북한의 모든 핵개발계획이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이같은 북한의 우려가 현실임을 증명해 주었다.⁴⁾

북한이 이처럼 불리한 협상 구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은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간 양자회담 구도를 재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북미 양자회담 중심으로 6자회담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간 양자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했던 4자회담에서도 시도했던 전략이다. 회담에 임하는 국가들은 의제와 절차에 따라 참여 의지와 이해관계에서 변화를 보이게 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극적 참여자를 점차 중립화시키거나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의제를 선택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단순한 전략만으로도 참여국들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점차 회담에 대한 피로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지루한 공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이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희석되고 내부의 결집도가 이완되면서

4) 후나바시 요이치, “6자회담, 각국의 이해갈등과 다자주의,” 『평화포럼 21』(2004).

북미 양자간의 담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북핵실험 이후 위기를 고조시킨 김으로써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하고서도, 정작 BDA문제와 같은 미북간 현안을 이유로 지루한 공방을 반복하면서 결국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간 직접 대화를 이끌어냈던 것도 북한의 이러한 협상 전략의 결과였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밖에서도 6자회담 참여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남한과의 양자관계를 활용하여 6자회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핵의 완전 폐기란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학관계와 자국의 이해득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은 북한 자체에 대해서보다 미국과의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각국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북한 카드를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셈인데 이를 간파하고 있는 북한은 자신과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경쟁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북한 카드의 효능이 입증되면 될 수록 제한된 북한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간 경쟁도 유발됨으로써 6자회담에서의 북한의 협상력을 커지게 된다. 북중 경제교류협력의 확대,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군장성급회담 등 6자회담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북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관계 개선 행보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총체적 효용가치가 이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카드의 가치 이하로 감소될 시점에 이르게 되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식할 때까지 6자회담의 효용성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양면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II.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2.13 합의에 따른 초기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검토할 때 2단계 불능화단계에서 2.13 합의에 따른 현존 핵프로그램의 폐기와 잠정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북한은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를 당초 예정된 2개월 내 완료하지 못하고 5개월이 경과된 지난 7월 이행을 완료하였다.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하여 영변의 50메가와트 발전소와 평북 태천의 200메가와트 발전소,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그리고 영변의 핵연료봉 생산 시설 등 5개 곳을 가동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요원들은 이들의 가동 중단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각종 감시 시설들을 설치, 실제 감시활동에 착수하였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한은 이미 5만톤의 중유를 북한측에 전량 제공하였고 6자회담 틀 내에서 구성된 각급 실무그룹 회의도 개최되었다. 초기 이행조치가 완료된 후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개최되어 초기 이행조치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2단계 불능화조치를 위한 개략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9월 경 6자회담 본회담과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단계 북핵불능화단계에 들어가면 상황은 미국과 남한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매우 유동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법의 기초가 될 로드맵 작성이 북한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조율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북

한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첫째, 북한은 6자회담에서 다룬 북핵문제를 현존 핵개발계획에 국한하려고 하는 것 같다. 2006년 핵실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 내역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보고할 지 알 수 없다. 북한은 초기이행조치에서 가동중단한 5개 핵시설의 폐쇄와 이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불능화조치단계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변의 5메카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의 불능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종결된 직후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핵시설의 해체 이전에 경수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평화적 핵이용권을 토대로 핵시설 해체에 따른 보상으로 핵시설 해체 이전에 경수로 건설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9.19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는 북한의 모든 핵개발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13 합의에서는 이를 전면 불능화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따라서 제2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농축우라늄 문제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농축우라늄 문제에 관해 시종일관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을 통해 도입한 원심분리기와 러시아를 통해 구입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특수 알미늄 관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불능화 조치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증거 제시에 북한은 농축우라늄관련 시설과 자재 장비가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한 것임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러한 미국에 대해 북한의 추가 설명이나 진실 고백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셋째, 기존에 추출했던 무기급 플루토늄에 대해서 북한은 과거 1차 핵위기 발생시 제출했던 자료를 수정없이 제출할 것이며 2차 핵문제 발생 이후 추출한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은 북한이 약 50킬로그램에 상당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과거와 같이 정확한 추출 내역을 밝히지 않고 현존하는 핵시설의 폐기, 해체 논의에 주력할 것이다. 무기급 플루토늄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핵무기 폐기 논의에서 함께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의 처리 문제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경우 핵군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 6자회담에서 가급적 핵무기 폐기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 문제가 제기될 때 6자회담 참가국 들 중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 보유국가인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비록 극소수의 핵무기일지라도 체제 생존을 위한 억제력 차원에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핵무기 폐기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⁵⁾

북핵 불능화에 관한 북한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입장 차이로 차기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모든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

5)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와 과제,” 『한반도 군비통제』41(2007.6); 서재진, “북한의 생존전략과 2.13합의,”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의 발표논문(2007.4.6).

는 완벽한 로드맵의 작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의 가동 중단에 이어 이를 폐기하고 해체하는 불능화조치에 모든 협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북핵 프로그램이 불능화될 경우 더 이상의 플루토늄의 추출이나 추가 핵무기 개발은 동결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현존 핵프로그램의 불능화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요구할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북미, 북일관계 개선이 될 것이다. 북한이 현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은 2.13 합의에 따라 나머지 95만 중유에 상당하는 보상이 될 것이다. 이미 95만톤 중유 제공에 대해 중국이 자국 몫인 20만톤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도 중유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불능화조치에 따른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3 합의시 북핵 불능화의 조건이 현존 핵프로그램만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모든 핵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인바 만약 북한이 현존 핵프로그램의 폐기만을 고집할 경우 중유 지원 규모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건설 지원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제공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경수로 건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밝히진 않고 있으나 현존 핵프로그램의 해체 이전에 금호지구에 건설 중단된 200메카와트 경수로 원자로의 재건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 사업은 전체 공정의 3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으므로 재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3-5년은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수로 건설 요구를 통해 최대 3-5

년 동안 현존 핵프로그램의 불능화 및 해체 완료 시기를 순연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2.13 합의에 따라 2006년 3월 김계관 부상 일행이 제1차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바 있다. 북미 양국간 국교 수립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으나 북핵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안정과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현실주의 외교 노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간파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핵을 폐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으로서는 임기 내 획기적 외교 업적이 필요한 부시 행정부의 현실주의적 입장이 변하기 전에 일단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 아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관계정상화 협의에 착수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양국이 수교하기까지는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13 합의 이전까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관계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한다는 수순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현존 핵프로그램의 불능화와 북미 관계정상화 협상을 병행 추진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원용하여 불능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관계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해

은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등에 대해 우선적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북한은 2단계 불능화조치에 앞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그 구체적 증거로서 테러지원국 지정철회와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를 꼽고 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등이 해제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및 각종 개발 지원 차관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⁶⁾ 이와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 차원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수교과정에서 별도의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북미간 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 보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던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과 성격 변화를 북미 양자협상에서 요구할 것이다. 실제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착수했었으나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에서 북한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끝에 결국 관계정상화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다.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북한은 국교 수립 이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계적인 관계 정상화 수순을 전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

6) 최수영, “대북(에너지, 경제지원) 협력 추진 전략,”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2007.4.6).

계정상화 이전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핵문제에 집중하면서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얻을 것이 많은 북한으로서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2단계 현존 핵프로그램의 불능화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실리를 확보할 경우 무기급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문제, 그리고 핵무기 폐기 협상 단계에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미국을 몰아세우면서 체제를 온전히 보존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안이한 접근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물론 북미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제까지 북미대화의 역사적 경험은 미국의 설부른 기대와 낙관주의는 북미협상시 북한에게 유리한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북미 수교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중대한 현상 변화이다. 따라서 미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과의 수교나 부시-김정일 회담 등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도 신중하게 북핵 불능화 협상에 임해야 한다.

Ⅲ.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과 동북아 신질서

현 단계에서 북한은 핵문제의 부분적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긴박한 제재 압력을 회피하면서 필요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현존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불능화조치를 이행하면서 이완된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공조를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존 핵프로그램의 불능화는 더욱 나쁜 상황을 방지하면서 당장 시급한 북핵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모든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단계별 접근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 북한의 태도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음에 주목하여 추가 시나리오를 상정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결심함으로써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경우와 북한의 핵무장 강화와 6자회담의 붕괴 등 파국으로 귀결될 경우 등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는 농축우라늄문제를 비롯하여 무기급 플루토늄, 그리고 핵무기의 폐기까지를 포함한다. 첫째, 농축우라늄문제에 대해 북한이 관련 기술, 시설 장비, 자재의 내역을 공개하고 폐기하는데 합의하는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의 핵심 주제는 농축우라늄 문제였던 점을 감안할 때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핵폐기에 따른 보상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북한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고백하고 새 출발을 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 방북시 일본인 납치를 시인했다가 겪었던 고충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농축우라늄문제를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과 학술연구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미국과의 대타협을 모색할 경우 핵불능화조치는 보다 의미있는 핵폐기 절차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자신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밝히기 보다는 관련 기술, 장비, 자재, 시설을 6자회담에서 일괄 구입하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개발 노력과 비용을 보존하려 할 것이다. 둘째, 무기급 플루토늄은 94년 이전에 추출했던 무기급 플루토늄과 2003년 이후 추출한 내역을 모두 신고하고 폐기하는 경우이다. 현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확보된 무기급 플루토늄까지 폐기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시 과거 핵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경수로 건설에서의 핵심 부품이 장착될 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핵실험 강행 이후 무기급으로 노출된 플루토늄 처리 문제는 핵무기와 동시에 협상 의제로 상정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대남 군사적 억제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폐기 조건을 가장 확실한 체제 안전보장과 맞바꾸려 할 것이다. 탈냉전과 9.11 이후의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을 검토할 때 실질적 군사력 없이 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실질적인 군사적 균형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결국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할 수 있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핵폐기와 맞바꾸어 추진할 것이다.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대타협을 이룩하고 중국의 보증 하에 완전한 핵폐기를 수용할 것이다. 결국, 북한으로

서는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하게 되는 셈으로써 핵과 체제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을 상호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논의를 거부했었다. 리비아의 경우처럼 일방적이고 일괄타결식 해법보다는 살라미 전술에 입각, 가능한 의제와 요구 사항을 세분화, 단계화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이 리비아식 대타협에 응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첫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실제 이상으로 과시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거나 1-2개의 핵무기를 무한정 보유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용 가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무기 1-2개 보유하는 것 이상의 체제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핵무기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남한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핵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고, 외부의 지원과 중국, 남한과의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회생의 토대를 구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제한된 경제교류협력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체제를 보존할 수 있는 만큼의 개방을 실시하더라도 개방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을 완전 설득할 수는 없다. 결국 핵을 포기함으로써 핵개발을 통해 세력을 강화해 온 국내 보수 강경파를 억제할 수 있다. 셋째, 리비아의 경우 차세대 리더쉽의 기반을 핵폐기에서 찾았듯이 북한의 경우에도 후계구도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핵보유는 부담이 크다. 김정일 이후 새로운 리더쉽의 창출은 새로운 전략의 모색

과 궤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김정일 시대의 통치구조는 선군정치에 기반하고 있으나 후계구도가 선군정치를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지 김정일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후계구도를 구축할 때 핵무기 폐기는 필요 조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폐기의 타당성과 경제적 실리를 쫓아 결단을 내려 미국과의 대타협을 모색할 경우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른 모든 정치적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더라도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핵폐기를 전제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북한의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재래식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남북군사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 불가침선 언과는 달리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진솔한 사과없이 전쟁의 법적, 제도적 종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에 동의하고 불능화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정치군사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6자회담을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IV. 북한의 핵무장 강화와 한반도의 장래

북한이 핵을 폐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 군사, 외교 및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6자회담을 무실화시킬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대북관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가장 확실한 체제 보장 수단으로서의 핵무기에 집착할 경우 2단계 핵불능화조치는 무한정 연장되고 6자회담은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조속한 핵불능화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강행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PSI 등을 통한 대북압박에 버티기 전략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중간 공조를 통해 6자회담 틀 밖에서의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내부체제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대북 침공에 대비해 남한을 인질로 삼아 항시 전시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남한 내부의 친북세력을 동원해 한미간 균열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김정일 이후의 권력구조는 급속히 군부 중심의 후계구도로 개편될 것이며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여 폐쇄적 자급자족의 전근대적 형태로 개편할 것이다.⁷⁾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의도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파키스탄 식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될 것이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은 극대화할 수 없지만 한반도 밖으로 핵물질을 유출하지 않음으로써 임박한 무력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국가로서 북한은 남한 및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선택적으로 받

7)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아냄으로써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10여기의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6자회담이 무실화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파키스탄화를 저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당장 무력을 동원하여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고립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실전용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모든 남북관계는 동결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북 고립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이 된 북한이 무한정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별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할 경우 내부적 균열과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적극적인 내부 균열을 통해 정권 붕괴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시작전권 이양계획을 연기하고 한미연합사체제를 보완하여 핵전쟁에 대비한 새로운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무실화시키고 핵무장을 강화해나가 기에는 북한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에도 평화에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체제와 정권이 일체화된 특수체제로서 핵무장이 결코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체제에 대해 가장 위협한 대응책은 유화책이며 가장 유효한 전략은 객관적 상황에 따른 현실주의적 대응책이다. 경우에 따라서 대내

외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더욱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拂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위해 주권의 일부를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는 군사안보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현재와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이며 동시에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폐기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가들은 본격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도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각 분야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며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⁸⁾

8) 유호열, “북한 핵무장과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 『한국군사』제23호(2006.12):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5).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북핵문제의 해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이행조치 완료에 따라 현존 핵프로그램을 계속 가동 중단하는 것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하여 더 이상의 핵물질 추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다만, 현실적 조건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하는 미국을 믿을 수 없고 우호적인 중국과 남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 통치하는 선군정치하의 자체 무장력과 일사분란한 내부 결속 뿐이다. 따라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상정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려되는 체제 위협 요인을 억제하고 체제를 보존하며, 내부 통치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원활한 경제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미국이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일괄타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로 불능화단계의 제반 의제들을 세분화하여 결단의 순간을 지체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질적인 안보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할 수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바로 상호주의적 접근이며 한반도 평화는 북한에 대한 투명한 상호주의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갖춰어질 때 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은 평화선언이나 감정이나 정략에 입

각한 대북정책은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과 전략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핵문제 해결의 대 결단이 가능해 질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식,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포용정책: 상관관계와 지속 필요성,” 『평화연구』 제15권 1호(2007년 봄).
-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와 과제,” 『한반도 군비통제』 41(2007. 6).
- 서재진, “북한의 생존전략과 2.13합의,”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2007. 4. 6).
- 유호열, “미북관계 개선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41(2007. 6).
- _____, “북한 핵무장과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 『한국군사』 제23호(2006. 12).
- 조 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조성렬,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로드맵과 향후 과제,” 『한반도 군비통제』 41(2007. 6).
- 최수영, “대북(에너지, 경제지원) 협력 추진 전략,”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2007. 4. 6).
- 후나바시 요이치, “6자회담, 각국의 이해갈등과 다자주의,” 『평화포럼 21』(2004).